

청년 일자리정책,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전북연구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로 전환' 제안 청년 직장선택 기준은 임금·복지·근로시간·근무환경 순

청년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를 넘어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만호)은 30일 이 슈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정책 패러다 임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 자리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최근 사회적·정책적 측면 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데, 실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일(work)로의 노동에 대한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 리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로, 청년들이 직장선택 시 주로 '임금 및 복지수준', '근로시간 (워라벨)', '근무환경(65.7%)' 순 고려 하고 있다.

전북 도내 일자리 중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시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좋은 일자리는 2023년 기준 157,182개로 2013년 93,325개보다

63,857개 늘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수준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고 고용기회 확대, 좋은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뿐 만 아니라 일자리연구센터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단순 고용정책에서 일 자리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 유입과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는 일자리 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강화 하고 있다.

김수는 책임연구위원은 "좋은 일자 리는 청년인구 이동의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 출 계획 수립, 좋은 일자리 연구·관 리 전담 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인식 조사 등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자문회의 개최

도내 체육계 교수진과 함께... 유치 논리 보강·전략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에 앞서 유치 성공을 위한 자 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정석 문화체육관광 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 장평가 리허설, 예상 질의 답변, 유치 논리 보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교대와 전북대 등 도내 체 육학과 교수진 10여명이 자문회의에 참가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폭넓 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 한 간략한 개요 설명에 이어 현장발표 리허설이 이루어졌으며, 리허설 과정 에서 제기된 의문점과 보완사항에 대 한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회의에 참가한 교수진들은 전북 의 올림픽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자 문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치 과정에서 의 지역 주민의 지지도가 성패를 가르 는 핵심 요소라 평가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전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진행된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현장 평가에 앞서 유치 성공을 위한 자문회의 를 개최했다.

문과 논의를 활용해 오는 1월 초로 예 정된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에 대비 하여 전북의 올림픽 유치 논리를 보강 하고,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석 국장은 "격의 없는 조연과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진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면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한분 한분의 마음을 모아 모 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대설·강풍·풍랑 피해 도민 지원 '가속도'

내년 1월까지, 재난지원금 총 21억 피해 도민에 지급 완료 목표

농기계·생산설비·철거비 지원으로 등 도민 일상 복귀 촉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풍랑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25년 1월에 지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 며, 특히 진안군(30.3cm), 장수군 (26.9cm) 등 동부지역 중심으로 무겁 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도내 8개 시군(군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에

서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4,509억 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시설 피 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유 시설 피 해 대부분은 인삼재배시설 86.4ha, 비 날하우스 파손 6.4ha 축사 13개소, 수 산 중앙식 시설 62개소 등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 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 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

다.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6개 시군 (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천만 원 미만인 2개 시군(남원, 완주)은 자 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다. 중대본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의 경우 산림작물은 행정안전부, 농업· 축산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 어업시설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 한다.

전북자치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전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 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 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와 생산설비 지원을 포 함하여 농림·축산·수산업 분야 피해에 대한 철거비용 계상(재난지수 10%)을 추가 지원하고, 국제 남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 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하 여 도민의 일상 복귀를 촉진할 예정이 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대설· 강풍·풍랑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 는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겨울철 대책 기간(2025.3.15) 동안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재 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정읍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공모 한 결과 정읍시가 선정됐다고 밝혔 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란 환경교육 활 성화 의지가 있는 도내 지자체를 대 상으로 지역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 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 치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 정,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지 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주민과 생

환경교육 조례·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기반에 높은 점수

2007년까지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위한 사업비 3억원 투입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산단 기업 ESG 환경교육 등 추진

태계가 공존하는 시범도시 운영계획 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모두가 자연과 소통하는 생 태 시민! 건강한 도시'라는 슬로건 이래 9대 과제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 환경교육 강사 양성 확대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 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3년간(2025~2027) 도 비 약 3억 원을 투입하고, 컨설팅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은 27일 시 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 로벌생명경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호남권 최초 '환경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 도시는 19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환경교육 시범 도시 지정 확대를 통해 시군 관심도 를 높이고 모범적인 환경 교육도시 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 침이다.

한순욱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환경 교육 시범도시 운영을 통해 모범사 례를 발굴하고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도 민들이 환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나가겠 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28억 추가 확보

현안사업 101억·재해재난 예방사업 45억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에 쓸 특별교부세 428억 원을 추가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가 필요 한 사업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 안전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이뤄졌 다.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은 △전북도민 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대표도서관 건 립 35억 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익 산 IC 연결도로 확포장 10억원 △농어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지원 증식

장 10억원 △토하 모하 공급시설 10억 원 등이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은 △화재 대응 복흥터널 재연설비 설치 35억원 △산경대교 보수보강 5억원 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 부세 확보는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정 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실효적 결 과에 얻어낸 성과"라며, "교부받은 사 업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불편 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 '안전'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지하수와 어린이 공원 위생 환경을 점 검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모두 불검 출되어 안전한 환경임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12 월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 소, 휴양시설 등 총 20개 지하수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잔 류염소 농도를 검사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 식중독 예방 과 지하수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어린이 공원 30개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놀이기구 손잡 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 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안전 기 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환경에서도 장 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하 수는 집단급식소를 통해 대규모 식중 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 한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 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 동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삼가 알려드립니다

故 이영혜(전 이영혜 산부인과 원장)씨가 12월 30일 소천하셨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빈소 :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일시 : 2025년 1월 2일(목) 오전 7시 30분

장지 : 1차 전주승화원, 2차 화신공원묘원

배우자 : 김종준(전주병원 의료원장)

아 들 : 김현민, 김현우(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자 부 : 김수진, 김지현

손 자 : 김 울, 김건후, 김도윤

손 녀 : 김서운